

# IFS 국가 정책 제언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와 정주

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조민혜 선임연구원



# 1

##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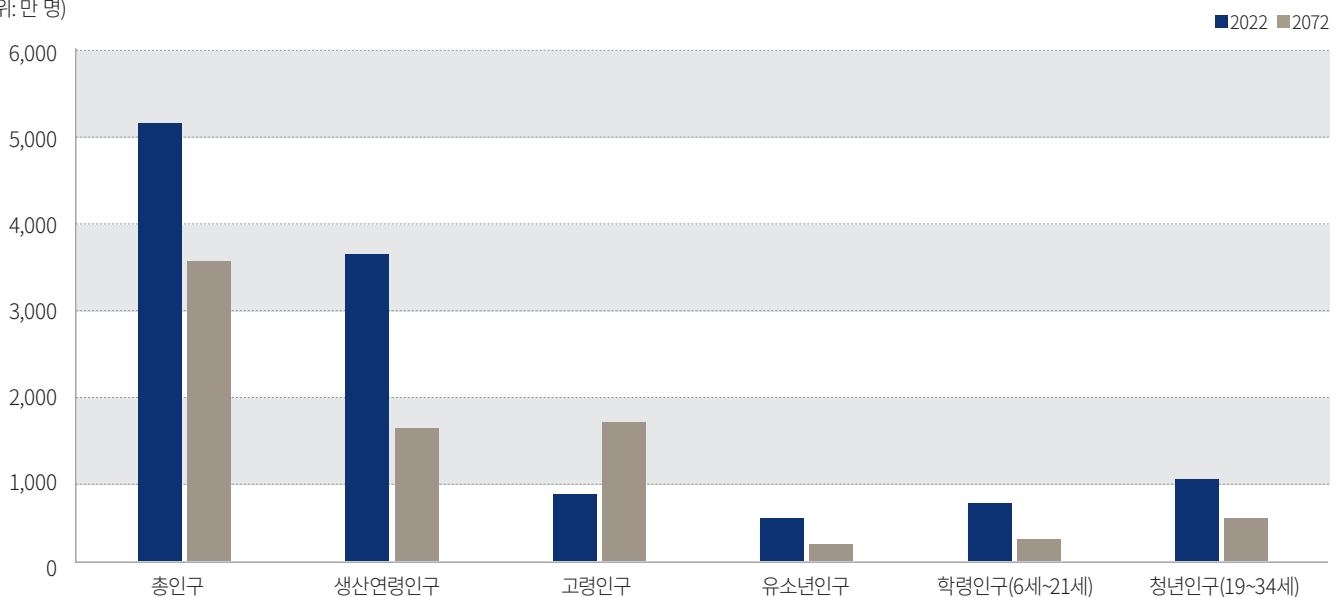
###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-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 증가

- 정부가 2023년 말에 발표한 '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'에 따르면,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22년 국내 전체 인구의 71.1%(3,674만 명) 수준이었던 생산가능인구 (15~64세)의 비중이 2072년에는 45.8%(1,658만 명)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
- 인구구조 변화로 산업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;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
- 이에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<Study Korea 300K Project>를, 법무부는 향후 5년 내 외국인 전문인력 10만 명 이상을 추가 유치하기 위한 <신(新) 출입국·이민정책>을 발표함
-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, 법무부는 첨단분야 고급 외국인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"톱티어(Top-Tier) 비자"를 신설하고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·체류 편의를 제공,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국내 취업·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하는 "청년 드림 비자" 신설,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등 유학-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

### [장래인구추계 (2022, 2072)]

(단위: 만 명)



자료: 통계청 <장래인구추계> 2022, 2072

# 2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 완화: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

##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요건 완화: 해외 사례

- 중국, 유럽연합, 대만, 일본 등 여러 국가는 이민정책 개선을 통해 2000년대 초부터 부족한 인력 문제를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음

\* 중국은 2008년부터 <천인계획>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자, 창업자 등 외국 고급인력 유치정책 도입,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유치계획을 통해 전략핵심분야 인재 유치정책을 강화하고 2020년부터 해외 고급인재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; 유럽연합은 2016년 외국 전문인력 활용 목적 블루카드(EU Blue Card) 발급 기준 완화; 대만은 2021년 해외 과학기술과 엔지니어링 고급인재에 대한 대만 정주 여건 개선 등

- 외국 인력 도입에 보수적이었던 일본도 2013년 아베노믹스 하에 외국 인재 유치정책 실행, 2017년 고도 외국 인재 그린카드 제도 도입, 2019년 특정기능비자를 신설, 2023년에 특별고도인재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인재 도입에 적극적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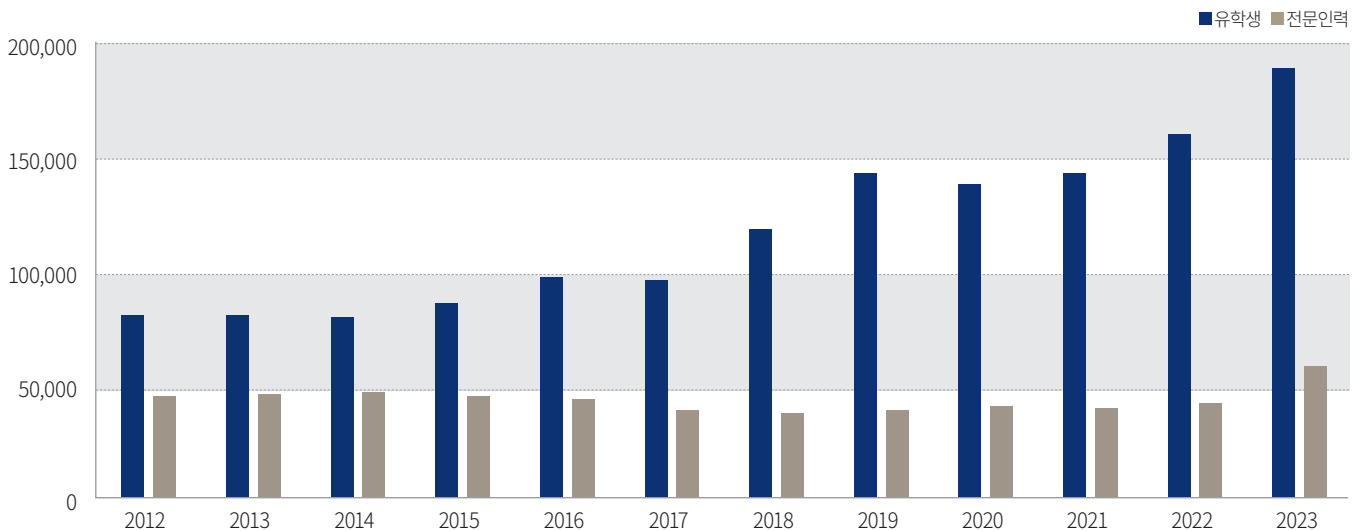
나서는 상황임. 또한,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방향을 우수 유학생 ‘유치-취업-정주’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.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는 전문직·기술직 분야 외국인인 52.5만 명임(한국 대비 5배 수준)

##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: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5% 미만

-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(E1~E7)은 2013년 기준 약 4만 명에서 10년 넘게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23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도됨

- 그러나 이는 정부가 숙련기능인력 연간 쿼터를 기준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한 것으로, 전문인력(E-7-1)은 답보 상태; 외국인 전문인력은 여전히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5% 미만에 불과함

## [국내 유학생 대비 외국인 전문인력]



자료: 통계청 <이민자 체류실체 및 고용조사> 각년도

## 국내 유학생 취업-정주 연계 부족

- 전문가들은 국내 유학생들의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업과 정주를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라고 조언함. 유학생은 외국에서 바로 입국하는 인력보다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력이 뛰어나서 업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음
-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처음으로 10만 명대를 돌파한 뒤 2024년 기준 20만 명대로 증가; 반면 2022년 유학생의 국내 전문인력 취업률은 6%에 불과해, 늘어난 유학생 수에 비해 취업 및 정주로의 연계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
-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결과, 응답자 77.9%가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직할 의사가 있으며 졸업 후 희망 진로 1순위로 한국 기업과 대학원을 꼽음.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의사를 조사한 결과, 일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의사는 34%에 그쳤으나 유학생 채용 의사는 51.3%로 나타남
-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을 활용한 사례는 독일과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음; 독일은 교육부-대학기업이 협력하는 'Campus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Talents' 제도를 통해 유학생 졸업 후 근로자로의 전환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'전주기' 프로그램 마련; 일본은 2019년부터 유학생 졸업 후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일본에서의 취업과 정주를 유도하고, 유학생-기업 연계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운영하는 공공취업센터를 통해 최신의 채용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함

##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필요

- 국내 유학생은 최근 정부가 쿼터를 늘린 숙련기능인력(E-7-4)에 해당하지 않음;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 전문인력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한 비자와 취업 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
- '외국인 유학생 대상 국내 기업 취업의사 실태조사'(한양대 노태우 교수팀)에 의하면, 유학생들은 국내 기업 채용 공고에 외국인 채용 여부 기재 등 정보제공 강화, 외국인 직원 적응 시스템 구축, 정규직 전환 보장 여부, 취업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힘
- 60%의 응답자가 대기업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, 중견·중소기업으로의 취업에도 전향적임; 또한, 취업 선호 지역은 수도권이 압도적이거나, 연봉·복지 조건을 충족할 시 74.4%의 응답자가 비선호 지역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
- 유학생과 기업의 원활한 정보 소통을 위해, 정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현재 부처별로 나뉘어있는 정책과 비자 현황을 종합적인 정보 체계 인프라를 통해 구축할 필요 있음



# 3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-자립-성장-기여 정주를 위한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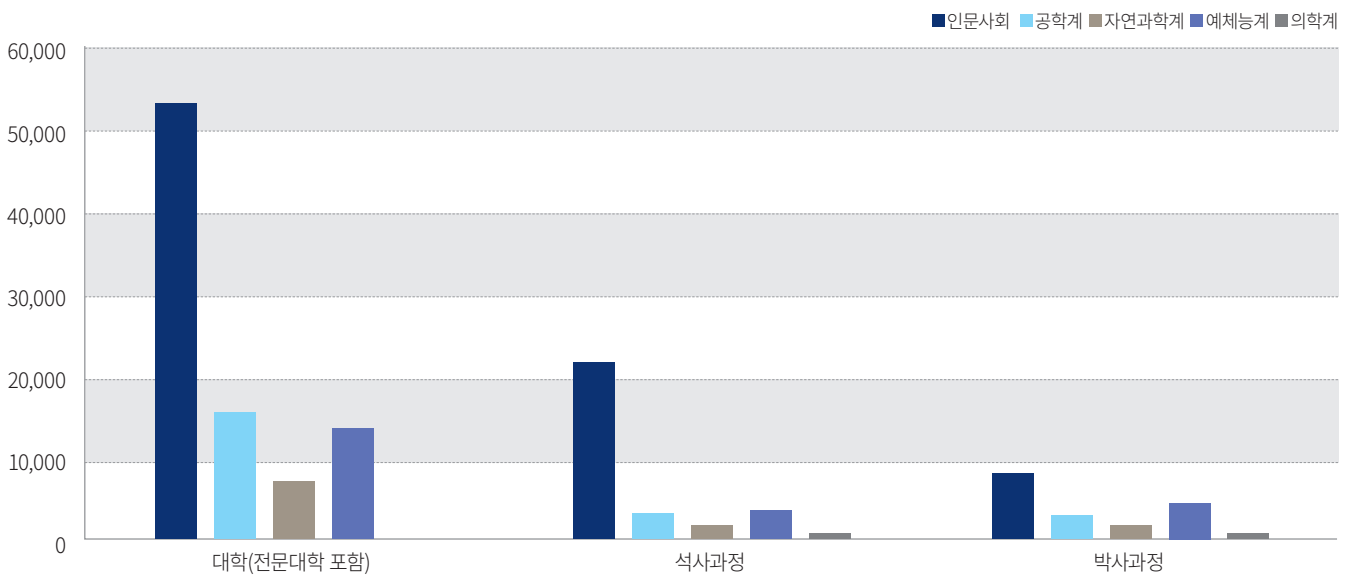
## 유입-자립-성장-기여를 향한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 제언

- 국내에서 유학생이 취업하려면 '특정활동'(E-7)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, 직종에 제한이 있고 임금 요건도 높은 상황임; 현재 부처별·지자체로 흩어져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와 구인기업·구직유학생 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도 부족함
- 유학생 비자에서 전환할 수 있는 전문인력비자(E-7-1)는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이 67개로 제한되어 있고,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80%(중소기업, 벤처기업, 비수도권 중견기업에는 GNI의 70%) 이상이라는 임금 요건이 있어 중소기업이 유학생을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임
-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, 임금이나

직종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; 국내에도 졸업 후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 별도 자격을 신설해 직종 및 임금 제한 없이 취업 비자를 취득하게 해야 함

- 또한, 외국인 유학생들도 졸업 후 교수, 변호사, 회계사 등 특정 자격을 취득했거나 정부·기관 등의 초청을 받은 연구자 비자(E1~E6)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폭넓은 비자 트랙을 제공하고, 정주를 위해 주거, 금융, 의료, 자녀 교육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
- 끝으로, 유학생들의 전공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방안 모색해야 함; 현재 국내 유학생 중 약 65%가 인문·사회 계열로,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-취업 연계 비자가 이를 더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함

## [2023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]



자료: 교육부 <2023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>